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임강택, 김철, 만해봉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2011년 12월 30일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남북협력연구센터 기획·디자인·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4(직통)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ISBN 978-89-8479-637-9 93340

가격 6,500원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임강택 외

『통일대계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수행하는 『통일대계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통일대계연구』는 남북 합의통일을 기본 전제로 포괄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통일의 과제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1차년도인 2010년에는 『합의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대주제 하에 통일의 비전과 가치, 통일의 대내외 환경 평가, 독일통일과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 통일 UCC/포스터/메시지 공모전을 통해 통일비전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연구 2차년도인 2011년에는 『합의통일 추진전략』이라는 대주제 하에 북한변화 전략,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외 과제 등을 연구하였다. 북한변화 전략은 현 시점부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연구이며,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은 그 이후, 즉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5년

5년

현재	북한변화	통일추진	통일이후
	단계	단계	통합단계

1차년도 사업 (2010)

- 01 통일환경 평가 (박종철 외)
- 02 통일비전 개발 (조민 외)
- 03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황병덕 외)
- 04 사회주의 체제전환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황병덕 외)
- 05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배정호 외)
- 06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최진욱 편저)
- 07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최진욱 편저)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국내포럼 결과이며 06과 07은 통일외교포럼 결과이다. 이 밖에 통일비전의 확산을 위한 통일 UCC/포스트/메시지 공모전이 있었다.

2차년도 사업 (2011)

- 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박형중 외)
- 01-2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임강택 외)
- 02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조민 외)
- 03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박종철 외)
- 04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최진욱 외)
- 05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최진욱 편저)
- 06 통통통일 (통일연구원)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통일외교포럼 결과이다. 06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이다. 이 밖에 통일비전 확산을 목적으로 『통일광장』이라는 이름의 강연 프로그램과 포럼이 실행되었다. 통일비전 확산을 위한 포럼은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라는 소책자로 발간되었다.

목차

요약	ix
I. 문제 제기	1
II.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의 추진방향	7
1. 동북3성의 발전전략과 대외경제협력정책	9
2. 중국의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16
3.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협력방향 및 주요특징	20
III. 북·중 접경지역의 경협현황과 발전: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25
1. 북·중 경제협력에서 단둥의 위상	27
2.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방향	28
3. 단둥(丹東)에서 나타나는 북중교역의 새로운 특징	33
4. 중국 위안화의 대북한 국경 유동액 규모	46
5. '일교양도(一橋兩島)' 개발은 단둥(丹東)의 초국경 경제협력 촉진 전망	49
6.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시사점	54
IV. 중국의 북·중 국경지역 경제협력 체계 및 투자 실태	59
1. 중국의 변경지역과의 경제협력 추진 및 관리체계	61
2.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제도 및 주요 기구(기업)	66
3.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시사점	74

V.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85
1. 공동의 목표 설정	88
2. 북한 '맞춤형' 경제지원과 협력 추진	91
3. 북한의 '4대 경제특구지역' 연계발전 방안 모색	94
4.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의 제고	97
참고문헌	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1

표·그림목차

〈표 II-1〉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 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22
〈표 II-2〉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현황	23
〈표 III-1〉 단둥(丹東)시 해외투자기업의 국가(지역)별 통계	34
〈표 III-2〉 2010년 단둥(丹東)시 대외수출상품 추이	36
〈표 III-3〉 단둥(丹東)시 북한관광 실태	42
〈표 IV-1〉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평가(2000~2011)	81
〈그림 III-1〉 북·중 교역액	32

요 약

1. 문제 제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크게 북한체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변화의 동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체제의 성격이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으로의 물자와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변경지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북·중 간에는 무역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 북·중 양국이 신의주의 황금평과 나선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계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외교안보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의 추진방향

최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과거

에는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이 ‘외자유치(引進來)’였으며, 이를 통해서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효과적으로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경제와 중국경제는 모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안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는 높은 물가상승과 소득증대에 따른 빠른 임금 인상으로 전통적인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고, ‘해외진출(走出去)’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외자유치와 함께 기업과 자본의 해외진출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 점이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중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정부의 동북3성에 대한 경제발전 전략은 동북진흥전략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동북진흥전략은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동북지역 등 노후된 공업기지에 대한 조정과 개조를 강화하며, 자원 개발 위주에서 도시와 지구에서 접속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공식화되었다.

2007년 8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동북지역 진흥계획은, 기존의 ‘동북3성 진흥전략’에 지정된 동북3성 이외에 내몽고 자

치주 동부지역을 계획에 편입시키고 이 지역을 양자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환발해만 경제권에 이은 4대 경제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을 ‘4개의 기지와 1개의 보호구’(국제 경쟁력을 갖춘 설비제조업 기지, 신형 원자재와 에너지 확충기지, 상품 곡물과 농축산업의 생산기지, 기술 연구 개발과 혁신 기지, 생태 안전 중요 보호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북지역 진흥계획에서는 추진 방향의 하나로 ‘지역 및 도농(都農) 간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하얼빈-다롄(大連) 경제벨트의 우선 발전, 연해경제벨트 조성계획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는 5점1선(5点1線)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점’에는 다롄(大連)창칭다오임항(長興島臨港)공업구, 잉커우(營口)연해산업기지, 랴오시(遼西)진저우만(錦州灣)경제구, 단둥산업원구와 다롄(大連)화원취(花園區)공업원구를 가르킨다. ‘1선’은 동쪽의 단둥에서 서쪽의 후루다오(葫蘆島)까지를 잇는 1,443km의 해변도로를 의미한다. 지린성은 창춘(長春)에서 훈춘까지를 연결하는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을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는 지린성 창춘(長春)시와 지린(吉林)시, 동부의 두만강지역을 포괄하여 교통축선을 따라 경제벨트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및 헤이룽장성의 하다치(哈大齊)공업벨트와 함께 중국의 동북3성 개발 계획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3. 북·중 접경지역의 경협현황과 발전

2009년~2011년에 북·중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정부의 고위층 상호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민간교류도 한층 더 활성화되

있으며 교류의 내용도 끊임없이 풍부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의 차원도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16자 원칙’(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상호공영)은 새로운 시기 북·중 양국 지도자들로부터 양국 경제협력의 원칙과 방침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단둥(丹東)의 북한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은 ‘16자 원칙’의 이행상황을 관찰하는 특수한 장소가 되었다. 객관적으로 단둥(丹東)은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가장 밀접한 변방도시로써 대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서 줄곧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과 북한의 특수한 실정이라는 이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단둥(丹東)통상구 교역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양자교역이 신속히 발전하였으며 참여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 말 현재 단둥(丹東)의 대외무역회사, 변경무역회사, 변경무역자주경영권생산기업이 무려 1,200개에 이른다. 여기서 대북 변경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400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자체경영이나 위탁대리의 형식으로 대북 변경무역을 하고 있다. 동시에 교역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북한의 대외무역회사들이 단둥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2010년 말, 단둥(丹東)에 진출한 북한기업은 30개이다.

둘째, 단둥(丹東)통상구 교역방식이 다양화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변경무역에는 변경호시(互市)무역, 변경소액(少額)무역과 관광쇼핑무역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이외에 단둥(丹東)시에는 수상교역선(水上交易船)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교역방식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밀수무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접경관광 협력이 부상하고 접경관광 쇼핑무역을 활성화되고 있다. 접경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국경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의 이동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또 북·중 접경관광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북·중 접경관광프로젝트는 이미 접경협력의

상징성 있는 브랜드로 부상하였고 관광과 쇼핑을 결합한 관광쇼핑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북·중교역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안화의 유통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위안화가 거래되고 있는 것은 접경무역이 활성화되고 양국인민들의 상호방문이 빈번해졌으며 관광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위안화는 북한에서 당국과 민간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액수의 위안화가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위안화가 유통되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국 변민들이 호시무역이나 변경소액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한다. 둘째, 관광이나 친척방문 때 휴대한 위안화가 북한에서 소비된다. 셋째, 북한의 국내은행이 단둥시의 상업은행에 위안화 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위안화를 저금한다. 넷째, 도박, 마약매매, 돈세탁, 밀수 등 비합법적인 거래에 위안화가 사용된다.

초 국경에서 유동되는 위안화의 규모와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현재 북·중 간 공식적인 은행거래통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위안화가 현찰을 휴대하는 방식으로 유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일인당 휴대한 위안화 금액을 추계해 낸 바탕위에서 단둥(丹東) 변방에서 전년 출입국 인원수를 파악하여 랴오닝(遼寧)성의 한해 초국경 유동량과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을 추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8년 단둥(丹東)시에서 위안화의 대북 초 국경 유동액을 추계해 보면 유출액이 21.2억 위안이고 유입액이 19억 위안이었다. 즉 당해년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은 2.2억으로 전년대비 3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중국의 북·중 국경지역 경제협력 체계 및 투자 실태

북·중 양국은 1950년에 『교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북·중경제협력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4단계에 걸쳐 변화하였다.

제1단계(1950~1992): 정부 간 기장현물교역(記帳易貨貿易)단계. 이 시기의 북·중교역은 주로 양국정부 간에 이루어졌고 거래방식은 양국정부 간에 기장현물교역 방식이었다.

제2단계(1992~2006): 자유발전단계. 1992년 북·중 양국은 기장현물교역 방식을 없애고 현찰결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관계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정시기의 마찰과 적응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의 본질은 새로운 경제협력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북·중경협은 시장경제논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제3단계(2006~2010): 정부유도단계. 2006년 1월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정부유도, 기업참여, 시장운영(政府引導, 企業參與, 市場運作)”이라는 북·중경협방침을 제기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동의를 얻었다.

제4단계(2010~현재): 201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상호이익을 공동이 도모하는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추진하는 것은 양국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상호공영(政府主導, 企業爲主, 市場運作, 互利共贏)”의 북·중경협의 새로운 방침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북·중경협 방침의 확립은 북·중경협이 기존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호혜호리(互惠互利), 공동발전, 상호공영(合作雙贏)의 새로운 협력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거 중국의 대북투자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이 많으나 행동이 적고, 상담이 많으나 결과가 적고, 소형이 많으나 대형이 적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북투자가 급격히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대규모 대외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과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고, 대외진출의 노하우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실한 북한의 인프라가 중국의 대북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점차 성숙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업의 차원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망동(盲動)에서 이성(理性)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자영역이 과거 분산되어 있던 것에서 점차 중점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규모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정부는 대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정책에서 시작하여 2006년에는 ‘정부유도’로, 2010년에는 ‘정부주도’라는 대북경협정책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차원에서는 북·중경협에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경제활동과 시장이 날로 규범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투자와 교역의 결합 형태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주로 보상무역의 방식을 취하였다. 즉 실물로 투자하고 교역의 방식으로 투자를 회수하였다. 중국기업은 북한에 생산시설 등 생산수단을 투자하고 생산물로 보상받았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은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가 아니고 특수한 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북한의 현재 실정에 적합하고 위험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동시에 대북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북투자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북한의 생산능력

이 부실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교역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제관계 사이에는 대립적·경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정세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한국자본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중의 3각 관계를 경쟁적 구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삶이 개선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경제가 대외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지원 경험을 살펴보면, 대외원조는 제도개혁과 병행되어 추진될 때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생산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기획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도적 지원프로그램과 농촌의 식량증산을 위한 개발협력프로젝트가 제도개혁과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4대 경제특구지역’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의 연계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제특구개발사업에 한국자본과 중국자본이 공동투자의 형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중국자본의 개성공단 추가 건설 및 금강산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자본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금평·신의주, 나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적으로 4대 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4대 경제특구를 연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연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물리적 연계망 구축작업으로는 교통망, 통신망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교통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적 연계는 각 특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특구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인력 활용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것을 의미한다.



I

문제 제기



남북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도 북한은 산발적인 충돌을 불사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정권유지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나 행동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였지만, 기존의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온 주요목표 중의 하나가 북한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고, 사용하는 정책수단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크게 북한체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변화의 동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체제의 성격이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으로의 물자와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변경지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북·중 간에는 무역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 북·중 양국이 신의주의 황금평과 나선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계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외교안보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이고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의 특징과 기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변경지역을 통한 경제협력정책과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의 전체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거래를 주요 분야별로 특징을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 보고서는 중국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하였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의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동연구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 제Ⅱ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이 추진되는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가 주변의 변경지역에서 어떤 경제협력정책을 추진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중국의 대북한, 그 중에서도 국경지역 경제협력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북·중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 실태를 주요 분야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의주·단동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야별 분석으로는 무역부문과 금융거래, 그리고 관광 및 물류협력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은 중국 요동대학교의 만해봉 교수가 집필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제Ⅳ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추진체제와 대북투자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과의 변경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의 대북한 투자 실적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장은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의 김철 박사가 집필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마지막 제V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다룰 것이다. 제Ⅲ장, 제Ⅳ장의 마지막부분에 기술된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필자들이 비교적 중국의 관점에서 협력방안이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여기에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북한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의 추진방향



최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이 ‘외자유치(引進來)’였으며, 이를 통해서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효과적으로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경제와 중국경제는 모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안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는 높은 물가상승과 소득증대에 따른 빠른 임금인상으로 전통적인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고, ‘해외진출(走出去)’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외자유치와 함께 기업과 자본의 해외진출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 점이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중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동북3성의 발전전략과 대외경제협력정책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은 가장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정책이 지니는 특성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을 접경지역의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지역들의 발전 속도가 서로 다르고 그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 연해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 낙후된 중부와 서부지역 및 동북3성 지역에 대한 별도의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동 계획의 8장에서 “서부대개발의 실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의 촉진”제하에서 서부대개발의 추진과 중부지역의 발전 가속 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¹ 이후 제11차 5개년계획에서는 서부 대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진흥(동북진흥전략), 중부지역의 발흥 촉진, 동부의 우세발전 지역의 시너지효과 창출 등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정부의 동북3성에 대한 경제발전 전략은 동북진흥전략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동북진흥전략은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동북지역 등 노후된 공업기지에 대한 조정과 개조를 강화하며, 자원 개발 위주에서 도시와 지구에서 접속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중국정부가 동북진흥전략을 제시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획득한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¹ 신태용,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성별 11·5계획』 (서울: 산업연구원, 2006).

있다. 동부 연해주지역의 발전이 내륙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정부차원에서 내륙지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하겠다.²

두 번째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상태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의 중심에 서있던 동부 해안지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발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한데 반하여, 과거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서 계획경제시스템에서의 탈피에 어려움을 겪은 동북지역의 경우 경제적 낙후를 초래하게 되었다.³

세 번째로는 동북3성지역의 인프라와 부존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 점을 들 수 있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대는 국제 원자재시장을 들먹거리게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부존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다. 동북3성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곡물생산지이자 임업생산지이며, 다양한 종류의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광산자원이 백여 종에 이르고 석유, 마그네사이트, 흑연, 사금, 옥 등의 부존량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중공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중국경제성

2 임강택, “동북아지역의 동태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남북한』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5), pp. 276~277.

3 동북3성지역의 기업과 각종 기관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 ‘동북현상’이라는 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동북3성지역의 문제는 중앙정부에게 매우 골치 아픈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이와 함께 동북3성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교통 및 물류조건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동북3성 진흥전략을 추진하는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외국인 투자는 주로 경공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경공업에 의해 주도되었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중공업 부문을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중공업 부문의 발전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 변화로 인하여 과거 중공업의 중심지였던 동북3성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2007년 8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동북지역 진흥계획은, 기존의 '동북3성 진흥전략'에 지정된 동북3성 이외에 내몽고 자치주 동부지역을 계획에 편입시키고⁵ 이 지역을 양자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환발해만 경제권에 이은 4대 경제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을 「4개의 기지와 1개의 보호구」(국제 경쟁력을 갖춘 설비제조업 기지, 신형 원자재와 에너지 확충기지, 상품 곡물과 농축산업의 생산기지, 기술 연구 개발과 혁신 기지, 생태 안전 중요 보호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북지역 진흥계획에서는 추진 방향의 하나로 '지역 및 도농(都農) 간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하얼빈-다롄(大連) 경제벨트의 우선 발전,⁶ 연해경제벨트 조성⁷계획을 핵심

5 여기에 편입된 내몽고 자치주 동부의 면적은 66만 5,000km²로 내몽고 자치구의 56%를 차지하며, 석탄 확인 매장량은 909억 6,000만 톤, 채유 가능 석유 매장량은 10억 톤을 상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 지역의 천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6 '다롄(大連) 경제구', 심양을 중심으로 한 요녕성 중부도시의 '랴오중(遼中) 경제구', 창춘과 지린을 중심으로 하는 '창지(長吉) 경제구' 및 하얼빈-다롄-치치하얼 공업 회랑지대를 핵심지역으로 하는 '하다치(哈大齊) 경제벨트' 등 4대 경제구를 건설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발전 벨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7 다롄(大連)을 핵심으로 하는 '창싱다오(長興島) 임강공업구', '잉커우(營口) 연해산업기지', '랴오시진저우완(遼西錦州灣) 연해경제구', 황해에 인접한 '단둥 산업단지' 그리고 '다롄화위안커우(大連花園口) 공업단지' 등 5개 지역과 랴오닝성 해안선을 관통하는 해변도로를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소위 '5점1선 개발·개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이 지역을 임항(臨港)산업과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으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특징은 랴오닝성이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포함돼 다롄(大連)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동북 경제의 리더로서의 랴오닝성의 위치 설정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랴오닝성은 다롄과 단둥(丹東)을 연결하는 ‘연해경제벨트’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2009년 7월 1일자로 중국 국무원의 공식 비준을 통해서 국가전략으로 인정을 받았다.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는 5점1선(5点1線)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점’에는 다롄장싱다오임항(大連長興島臨港)공업구, 잉커우(營口)연해산업기지, 랴오시(遼西)진저우만(錦州灣)경제구, 단둥산업원구와 다롄(大連)화위안커우(花園區)공업원구를 가르킨다. ‘1선’은 동쪽의 단둥에서 서쪽의 후루다오(葫蘆島)까지를 잇는 1,443km의 해변도로를 의미한다.

지린성은 창춘(長春)에서 훈춘까지를 연결하는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을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는 지린성 창춘(長春)시와 지린(吉林)시, 동부의 두만강지역을 포괄하여 교통축선을 따라 경제벨트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및 헤이룽장성의 하다치(哈大齊)공업벨트와 함께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지린성은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춘)-지(린)-투(먼) 개방선도구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창지투선도구’ 구축 계획은 창춘-지린-투먼 지역 산업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을 자

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⁸ 중국 정부의 랴오닝성 중시 입장은 동북3성 진흥전략에서 나타난바 있다. 동북3성지역 진흥을 위해 1차로 100개 사업을 선정하여 74억 달러를 지원하였을 때, 랴오닝성에 52개 사업 53억 달러가 지원되고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는 각각 37개에 14억 달러와 11개에 7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동차, 버스, 에틸렌, 생물, 광전기, 과학기술 등 10대 산업기지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대외개방과 국제협작의 중심 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하에서 ‘창지투 개방선도구’ 건설을 중심으로 ‘두만강자유무역구’, ‘창지(長吉)국제륙항(陸港)구’, ‘과학기술창의구’, ‘국제 협작 산업구’, ‘고신봉사업집중구’, ‘현대물류구’, ‘생태관광구’, ‘현대농업시범구’ 등 8대 기능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⁹ 이는 료오닝성이 다롄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는 계획으로서, 러시아 및 북한과 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훈춘을 중심으로 지린성의 주요 지역을 연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북진흥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교우위에 입각한 성장거점의 구축 및 연계망의 건설을 통한 확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동북진흥전략이 강조하고 있는 대외개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겠다.¹⁰ 이 지역 대외개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東北振興計劃綱要』(2003.10)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대외개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후 국무원 관공청은 『東北振興事業要點通知』(39호 문건, 2004.4)를 통해서도 접경국가 및 기타 성과의 협작을 강조함으로써 대외개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북노공업기지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위한 의견』(36호 문건, 2005.6)에서는 접경국가와의 경제무역협력 강화 등 개방 확대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및 러시아의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우선적인 지원 방침

9 “<장춘-길림-두만강지역 개방특구> 건설키로,” 『길림신문』, 2007년 9월 6일; “장춘-길림-두만강 개방선도구역구축에 대하여,” 『연변일보』, 2007년 11월 29일.

10 이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원동욱, “북·중 간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통권 제14호 (한국수출입은행, 2007), p. 13의 표를 재정리한 것이다.

을 천명하였다.

랴오닝성은 연해경제벨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해외진출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 러시아·북한 등과의 자원 협력개발사업의 추진, 그리고 동북지역 경제협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린성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두만강유역의 개발 및 훈춘 합작구 건설을 통해서 지역협력의 중심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한국·일본·북한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며,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헤이룽장성을 아시아-유럽의 창구 및 동북아의 산업·금융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변화에 힘입어 동북3성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제12차 5개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접경지역의 개방 구도를 완비할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¹ 즉 연해지구의 대외개방을 심화시키고 내륙지역의 개방을 확대하며 변경지역의 개방을 촉진시킨다고 강조한 것이다. 비록 특정 변경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정책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개혁·

11 “변두리지역의 지리적 우세를 발휘하여 특수한 개방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며, 중점 통상구, 변경도시, 초국경 경제협력지구와 중점개방시험구의 건설을 다그친다. 기초시설과 주변국가의 유무상통을 강화하며 주변을 대상으로 한 특색 있는 외향형 산업군과 산업기지를 발전시킨다.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네이멍구(內蒙古)은 동북아에 개방하는 중요한 허브로 건설하고, 신장(新疆)은 서부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기지로 건설하며, 광시(廣西)는 아세안과 협력하는 새로운 기지로 건설하고, 윈난(雲南)은 서남을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교두보로 건설하면서 변두리지역의 대외개방수준을 끊임없이 높여간다.”

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기조 하에서 세계경제와의 협력을 추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접경지역에서의 경제무역협력이 보다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의 지방정부들도 자신들의 경제발전전략에 접경지역의 개발을 포함시켰으며,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중국의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가. 압록강 접경지역 개발계획

중국 국무원이 『遼寧沿海經濟發展計劃』(이하,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을 국가전략으로 비준한 이후 랴오닝성은 다롄과 단둥으로 이어지는 해안지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계획의 기본 구상은 항구도시인 다롄을 중심으로 단둥과 잉커우(營口), 판진(盤錦), 후루다오(葫蘆島) 등 다롄 좌우에 포진된 해안도시들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조선과 정유, 장비제조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건설계획은 연해지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이 지역을 임항(臨港)산업의 집결지대, 개혁 및 혁신의 선행지대, 대외개방의 선도지대, 투자 유치의 우선지대, 주거환경이 편리한 신도시 군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5개 중점 발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다롄동북아국제운항센터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벨트의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며, 경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20년 까지 다롄동북아국제운항센터와 국제물류센터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5점1선' 연해경제벨트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임항산업 집적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또한 랴오닝성의 단둥시과 지린성의 통화(通化)시를 연결하는 통단(通丹)경제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둥시와 통화시는 우선적으로 4억 4,000만 위안(763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통화항을 건설, 단둥항과 통합관리지역으로 묶어 국제보세물류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변도철도'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¹² 이 사업은 오랜 논의를 거쳐, 2003년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서에 처음으로 반영되었고, 2004년 국무원 심의를 통과한 이후, 철도부의 '중장기 철도계획'에 포함되었다. 중·러, 중·북 간의 변경지역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되는 동변도철도는 동북지역의 10개 도시, 30여 개 현을 경유하며, 북한과 러시아를 거치는 동안 10여 개의 변경세관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고,¹³ 2012년까지 건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계기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철도건설사업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북·중 접경지대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동북지역은 현재 '단둥~신의주', '투먼~남

¹² 권오국,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5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pp. 249~252 참조.

¹³ 동변도철도는 헤이룽장성의 무단장(牡丹江)에서 지린성의 투먼(圖們), 옌지(延吉), 룽정(龍井), 허룽(和龍), 바이허(白河), 통화(通化)를 거쳐 랴오닝성의 관수이(灌水), 단둥(丹東), 장허(庄河), 다롄(大連)으로 이어지는 1,389km에 이르는 국경철도이다. 이 가운데 허룽~바이허, 통화~관수이, 장허~단둥 구간 총 411km가 미 개통구간이었는데, 허룽~바이허 구간 103km를 2008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따르는 현재 미 개통구간은 통화~관수이, 장허~단둥 구간만 남아있다.

양, ‘지안(集安)~만포’ 등, 세 지점에서 북한과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변도철도는 이 세 지점 모두를 경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철도가 완공될 경우 북·중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두만강 접경지역 개발계획

두만강 접경지역에 대한 지린성의 개발계획은 창춘-지린-투먼지역을 연결하여 이 지역을 중심축으로 지린성의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2009년 11월에 공개된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의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기획 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은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의의와 총체적 요구,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건설의 가속화, 장길도와 국내지역의 연동 개발 촉진 및 지지, 두만강 국제지역협력을 강력하게 추진, 기획의 실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개발계획은 창춘시, 지린시과 투먼강 일대를 핵심으로, 중·몽 대통로를 횡으로 관통하며, 밖으로는 대두만강 경제권과 동북아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경제성장 축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 지역을 중국 국경 개방·개발의 중요 거점지역, 동북아 개방을 향한 중요 통로, 동북아 경제기술협력의 중요 무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은 2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2012년까지 이 지역의 경제 총량을 현재보다 2배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2단계는 2020년까지로, 중국 두만강지역 개방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고, 경쟁우위의 산업체계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지역 경제 총량을 4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중요한 성장 지대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지투 선도구’는 8대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개발되는데, 두만강지역 자유무역지대의 건설, 국제내륙항구의 건설, 과학창업지대 구축, 국제적 합작산업지대 건설, 현대적 물류지대 구축, 생태관광지대 건설, 현대농업시범구 건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정과 주변지역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창지투 개발사업은 북한지역의 안정 유지 및 북한경제와의 협력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 접경지역의 개발전략과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2005년 6월, 중국정부는 동북3성 대외개발의 본격화를 선언한 『동북 노공업기지 대외개발의 진일보 확대를 위한 의견』(36호 문건)을 통해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도로·항만·구역(특구)에 대한 일체화와 동북진흥계획과의 연계·발전시키겠다는 경제전략을 공표하였다.¹⁴ 이후 지린성 정부는 중앙정부의 동북진흥계획과 대북경제개발 전력에 호응하여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한의 나선특구 개발을 연계해서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투자하여 추진한 원정리~나진항 47km 도로의 포장공사가 지난 2011년 6월에 완공되었으며, 나진항 개발계획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창리(創立)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와 2·3호 부두의 정박지를 보수·확장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

¹⁴ 김범송,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5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pp. 4~5.

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4~6호 부두시설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고 한다.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서 동해 출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지난 7월까지 5회 걸쳐 12만 톤의 석탄을 시범적으로 수송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앞으로 나진항을 통해서 태평양지역으로의 수출항로를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된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정책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정부는 기존의 수동적인 ‘위기관리’에서 ‘적극적 관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정책 전환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핵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양방향으로 접근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협력방향 및 주요특징

중국의 제12차 5개년계획(‘12.5규획’)은 내수지향 및 민생안정을 위한 질적 성장과 경제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난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2.5규획’기간 동안 기존의 고성장노선을 수정하여 연평균 7%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¹⁵ 김범송,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통일문제연구』, p. 5.

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 하에서 중국은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하고 7대 신흥산업을 육성하여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을 친환경 및 첨단산업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12차 5개년계획을 통해서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민생, 혁신 환경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과 글로벌 균형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정책 전환은 북한과의 협력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북한경제에 대한 개입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사업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성장정책이 동북3성 개발전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동북3성지역의 개발전략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북한경제와의 협력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중국자본의 대북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광물자원 개발 및 채취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열악한 SOC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중국의 북한 광산에 대한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고, 투자대상 광산이 북한 전역에 고르게 퍼져있어 중국 자본의 대북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2000년대 중반에 빠르게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1〉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 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지역		광산	체결시기	종류	투자금액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탄광	2005.07	갈탄	
	회령시	오룡광산	2006.05	철	3.16억 위안
	무산군	무산광산	2006.11	철	1억 위안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광산	2004.03	철	1억 달러
	장진군	장진광산	2004.05	몰리브덴	240만 유로
	허천군	상농광산	2004.08	금, 동	
양강도	보천군	보천탄광	2006.09	금	2,000만 위안
	혜산시	혜산청년광산	2008.11	동	4,400만 위안
	갑산군	8월 광산	2006.09	동	1,000만 위안
	갑산군	문락평광산	2006.04	철	1억 위안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광산	2007.03	철	6억 위안
	구장군	룡등탄광	2005.10	무연탄	
	구장군	룡문탄광	2005.10	무연탄	
	의주군	덕현탄광	2007.03	철	
	신천군	신천탄광	2006.04	금, 은	
평안남도	순천시	2.8직동청년탄광	2005.04	무연탄	
	은산군	천성청년탄광	2005.04	무연탄	
	성천군	룡흥탄광	2007.09	몰리브덴	443만 달러
황해남도	웅진군	웅진광산	2008.06	철	3,000만 유로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광산	2006.03	연, 아연	3.5억 위안
	수안군	수안광산	2007.01	금	

출처: 김상훈,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북한경제리뷰』, 8월호 (KDI, 2010.8), p. 78.

다음으로는 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특징으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와 도로를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수준이며, 북한 내륙지역에는

나진항 개보수사업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북한 산업인프라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질적인 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현황

구분	구분	투자자	주요 내용
다리	압록강 제2대교	교통운수 부상무부	- 단동~신의주 신압록강대교 건설 중 · 2010.12.31 착공
	두만강대교	훈춘시	- 훈춘~원정리 두만강대교 보수공사 · 2010.6.1 완료
도로	원정리~라진항 고속도로	훈춘시	- 취안허교~선봉~라진항간 54km 보수공사 · 2010년 3월 합의
	산허~청진간 고속도로	룡정시	- 룡정시 산허~청진 간 고속도로 신설 논의 중
철도	창춘~훈춘 고속철도	훈춘시	- 2015년 완공목표 공사 추진 중
	투먼~청진항 철도	투먼시	- 투먼~청진 170km 노후 철도 보수 · 2010년 공사 착수
발전소	中 만강루발전소 -北 문악발전소	지린성	- 2010.3.31 동시 착공, 2013년 완공 예정 · 그 외 수풍, 운봉, 위원, 태평만발전소 등 총 4개 압록강 유역 발전소 북·중 공동관리
항만	라진항 개보수 및 독점사용권	지린성	- 라진항 제1호 부두의 2, 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 제4호 부두 신축 10년간 독점사용 · 2009년 10월 합의

출처: 내외신 종합, 최정근, "최근 북·중 경제협력 실태," (평화재단 주최 비공개전문가포럼 발표자료, 2011.3).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예전과는 달리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사업이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전략에 따라 대북투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투자사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또한 중국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서 정부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의 중국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경제문제 해결과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의 자금이 절실한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이외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북한당국으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북·중경제관계는 중국의 소비재나 북한의 광산물 등 일차산품의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을 통해서 산업기반시설 등 자본재 부문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자본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중국 자본의 대북투자 수익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투자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대 현상이 낮은 임금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특징이다.



Ⅲ

북중 접경지역의 경험현황과 발전: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1. 북·중 경제협력에서 단동의 위상

2009년~2011년에 북·중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정부의 고위층 상호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민간교류도 한층 더 활성화되었으며 교류의 내용도 끊임없이 풍부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의 차원도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16자 원칙’(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상호공영)은 새로운 시기 북·중 양국 지도자들로부터 양국경제협력의 원칙과 방침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단동(丹東)의 북한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은 ‘16자 원칙’의 이행상황을 관찰하는 특수한 장소가 되었다. 단동(丹東)의 접경지역에서 개발 중인 ‘일교양도(一橋兩島)’¹⁶ 개발프로젝트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사업으로 되었으며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새로운 경협프로젝트에 대한 전망도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단동(丹東)은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가장 밀접한 변방 도시로써 대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서 줄곧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과 북한의 특수한 실정이라는 이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직면한 어려움은 많았지만 양자가 오랜 시기 진행해온 초국경 경제협력은 아주 깊은 지역적 경제협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근본원인을 보면 첫째, 북·중 양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친선 관계가 양자 간의 협력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방적인 지역주의 협력모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 간은 저렴한 운송비용과 공통된 지역이익으로 인하여 지역경제통합

¹⁶ 신압록강대교, 황금평과 위화도가 포함된다.

의 유인을 더욱 가지게 되고,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하는데 남달리 좋은 조건이 있게 된다.’ 최근 발표된 북·중 접경지역 경제개발과 협력정책들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정책을 계승했다는 특징과 새로 나타난 변화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향후 발전추세를 전망해보면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교류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북·중관계의 지위는 제고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개발과 협력도 제고될 것이다. 이는 남·북·중 3자 협력을 우회적으로 촉진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와 주변나라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방향

가. 새로 정립된 북·중관계의 지위

북·중 경제협력이 격상하게 된 일차적인 조건은 양국 지도자의 직접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중경제협력관계가 격상된 중요한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양국 지도자들이 북·중관계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실은 북·중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들어섰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북·중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지도자 간에 ‘전통계승(繼承傳統), 미래지향(面向未來), 선린친선(睦隣友好), 협력강화(加強合作)’의 원칙으로 북·중 선린·친선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양국민의 행복을 더욱 도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0년 5월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3차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중 친선협력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며 중국은 줄곧 ‘전략적 고도’와 ‘장원한 견지’에서 양국관계를 파악하고 수호하며 추진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도 북한 당과 정부도 줄곧 ‘전략적 고도’와 ‘장원한 견지’에서 북·중관계를 대하고 파악하는 것을 견지하여 왔으며 끊임 없이 공고 발전하는 북·중관계를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나. 새로 정립된 북·중관계의 지위가 양국 경제협력 방향을 결정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점차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북·중관계도 기존의 ‘계획경제체제 대 계획경제체제’의 관계에서 ‘시장경제체제 대 계획경제체제’의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대북한 경험에서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그 후 북·중관계의 지위가 정립됨에 따라 북·중경제협력은 두 단계를 걸쳐 발전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북·중경협은 ‘정부유도(政府引導), 기업참여(企業參與), 시장운영(市場運作)’이라는 ‘12자’ 방침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서 냉전종식 후 북·중경협관계가 기본적으로 조절되었고 이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전례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5년 10월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촉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북·중 교역액은 15.8억 달러

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2006년 1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베이징(北京) 등의 지역을 답사하였다. 중국은 ‘정부유도, 기업참여, 시장운영’ 방침을 강조하면서 양국 경제무역과학기술 연합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협력영역을 계속 개척하며 경협수준을 높일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첫 지하핵실험은 중국의 대북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6년 북·중 교역액은 또 한 차례 새로운 기록을 돌파하여 18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양국 교역액 19.74억 달러 기록)에 이어 2008년에도 북·중경협은 계속 발전하였다. 6월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기술 협력, 항공운송, 자동차운송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의 북·중 교역액은 27.8억 달러에 이르면서 연속 10년간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둘째 단계는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이다. 북·중경협 방침은 ‘정부주도(政府主導), 기업위주(企業爲主), 시장운영(市場運作), 상호공영(互利共贏)’의 ‘16자’ 방침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북·중 양국의 국가 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미 초보적이거나 그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2010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은 재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호리공영의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하면서 북·중경협 ‘16자’ 방침을 내놓았다. 새 경협방침은 북·중경협의 방식이 기존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호혜호리, 공동발전, 상호공영(合作雙贏)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영역을 계속 개척하고 양국의 경협을 확대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2011년 7월 12일에 중국 친선대표단 단장인 장덕강(張德江) 중국 국무원부총리는 북한을

방문하여 『중조친선협력호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 체결하였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양자관계를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북·중교역의 새로운 특징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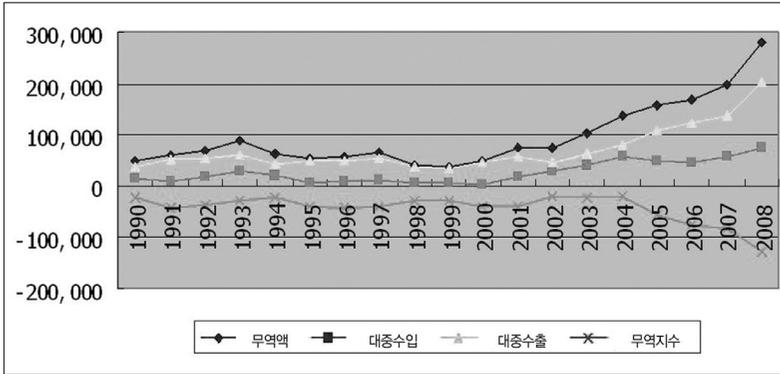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북·중교역은 줄곧 양자의 협력원칙과 방침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자의 교역액이 상승했지만 북한의 교역적자가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북·중교역의 변화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역실적이 굴곡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을 기점으로(4.83억 달러)하여 1993년에는 8.996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1995년에는 5.496억 달러로 하락하였고 1997년에는 6.563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1999년에는 3.7억 달러로 최저치에 이르렀다.

둘째 단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역실적이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의 4.88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7.8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대외교역액의 50%를 차지하였다<그림 III-1 참조>. 이 단계의 북한 대외교역은 중국의 주도 하에 교역액이 안정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 지리 등의 원인 이외에 중국이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있었다. 북·중 교역액의 안정적인 성장은 북한의 경제건설과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및 물기안정과 공급 완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림 III-1) 북·중 교역액

(단위: 만 달러)



2009년에는 북·중 교역액이 다소 하락되었으나 여전히 26.8억 달러에 달했다. 2010년 1~10월에는 양국 교역액이 동기대비 32% 성장하였으며 2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9년의 전년 교역액을 넘어섰다.

북·중 교역의 품목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은 광물성연료와 광물성기름, 보일러와 기계류, 전자기기와 음식 및 영상설비, 차량 및 부품, 철강, 비닐 및 비닐제품, 인조섬유, 화학비료, 곡물, 철강제품 등이다. 대북 수입품목은 석탄, 철광석, 복장 및 장식품, 철강, 오징어 등이다.

주목할 것은 북·중교역이 대폭 성장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북한의 적자가 커지기 시작한 점이다. 2003년에는 2,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에서 2009년에는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1~10월에는 8.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북한이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불능력 저하 및 국제시장의 가격변동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동시에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는 석탄채굴, 광산채굴, 항구건설 등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형 기계시설들이 대량 투입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중국의 대북수출이 늘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북한의 대중국수출액이 작은 것은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가 아직 뚜렷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단둥(丹東)에서 나타나는 북·중교역의 새로운 특징

가. 단둥(丹東)통상구 교역의 변화 양상

(1) 양자교역이 신속히 발전하였으며 참여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

2010년 말 현재 단둥(丹東)의 대외무역회사, 변경무역회사, 변경 무역자주경영권생산기업이 무려 1,200개에 이른다. 여기서 대북 변경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400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자체경영이나 위탁대리의 형식으로 대북 변경무역을 하고 있다. 대외무역, 상업, 공급과 판매 및 생산기업, 그리고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 및 개인경영에 이르기까지 다(多)차원, 다(多)루트의 변경수출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동시에 교역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북한의 대외무역회사들이 단둥(丹東)에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단둥(丹東)은 중국의 대북교역기업들의 집결지와 정보중심지가 되었다.

이미 120여 개의 북한 무역회사들이 단둥(丹東)에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단둥(丹東)에 상주해 있는 북한 상인들이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단둥(丹東)은 이미 비교적 완벽하고 다차원적이며 다루트적인 대북교역 운영시스템이 형성되었으며 중국의 대북교역활동기업의 집결지로 격상되었다. 단둥(丹東)에 진출한 북한기업들의 업종을 보면

주로 기계, 제련, 의약, 공예품, 수산물, 식품, 건축자재, 농업, 식당 및 오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말, 단둥(丹東)에 진출한 북한기업은 30개이다. 그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5개인데 투자총액이 4,957만 달러이고, 그중 외자 계약액이 1,543만 달러이며, 실현된 외자액은 1,360만 달러로써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6%를 차지한다. 기업의 제품범위는 주로 식품, 기계, 금속제련 등이다. 단둥의 주요 교역상대는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홍콩 등 나라와 지역이다. 그중 교역액이 가장 큰 나라는 북한이다.

〈표 Ⅲ-1〉 단둥(丹東)시 해외투자기업의 국가(지역)별 통계(201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개, 만 달러)

국 가	기업개수	투자총액	계약외자액	실현외자액	실현외자액비중(%)
홍 콩	150	268,677	172,331	73,368	55.36
마카오	16	33,460	31,090	16,845	12.71
일 본	104	20,479	8,543	6,235	4.77
한 국	259	40,643	32,459	19,057	14.38
대 만	31	12,315	11,545	2,561	1.93
미 국	48	11,509	7,750	3,571	2.69
북 한	30	4,953	1,543	1,360	1.06
캐나다	10	1,953	1,843	124	0.09
싱가폴	8	7,630	5,576	3,846	2.90
기 타	49	27,431	5,872	5,461	4.12
합 계	705	429,054	278,552	132,518	—

(2) 단둥(丹東)통상구의 대북 수입상품의 특징 변화

단둥통상구의 대북 수입상품의 특징 변화에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변경소액교역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구체적으

로 광사(鑛砂)류 제품의 수입이 강한 추세를 보이고 철, 연 광사의 성장세가 강하며 아연, 은 광사가 약간 성장하고 있고 몰리브덴 광분과 텅스텐 광분의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둘째는 희유금속의 수입이 늘어났다. 셋째는 단둥(丹東)의 실리콘회사가 규소금속을 대량 수출하는 영향을 받아 전력 수입량이 늘어났다.

(3) 양자의 수출입상품 구조의 변화

단둥(丹東)의 대북수출 상품구조가 소액상품 위주에서 대량수출 상품 위주로 변화를 가져왔다. 상품구조를 보면 단둥(丹東)통상구 세관에서 징수한 세금액이 4위권에 든 것은 원유, 철강제품, 규소금속, 식량이다.

대북수입에서 교역액이 가장 큰 것은 복장과 그 부품으로써 수입총액의 35.5%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귀금속 및 제품인데 총수입액의 21% 차지하고, 세 번째로 전기기계제품과 부품으로 총수입액의 10.7% 차지하며 마지막으로 무연탄으로 총수입액의 6.7% 차지한다.

대북수출상품을 보면 교역액의 순서로 원유, 기전(機電)제품과 부품, 복장 및 부품, 농산품, 귀금속 및 제품, 방직재료 및 방직물, 수산물 및 비닐제품이다. 이 외에 가구제품의 수출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단둥(丹東)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가구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인기가 늘고 있는 수출상품으로 되었다. 가구수출의 증가는 북한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양자의 수출입상품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입상품구조가 합리한 방향으로 변화

단둥(丹東)은 대북수출에서 상품의 부가가치와 기술함량이 높은

것을 위주로 하지만 수입상품은 부가가치와 기술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0년 말, 단둥(丹東)은 대북한 수출에서 과거 생필품 위주에서 생산수단 위주로 전환을 가져왔는데 주로 일용백화, 복장, 방직원자재와 원단, 식량 및 기름과 식품, 가정용 전기(電器), 기계시설, 석유제품, 농약과 화학비료, 화공제품, 스테인리스강 및 식기 등 제품들이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농산품은 수산물, 식품, 과일, 나무 및 나무제품, 식량, 식용기름 등이다.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상품은 광산품, 수산물, 의류, 종자 콩 및 약재, 금속재료(강철괴와 폐철), 나뭇물 및 견과(堅果), 목재, 가죽 및 제품이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1차 제품이 감소하고 가공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업제품이 수출품의 73.6% 차지하고 있다.

〈표 Ⅲ-2〉 2010년 단둥(丹東)시 대외수출상품 추이

순서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 (단위: 만 달러)	성장률(%)
1	복장	29,280	18.79
2	식품	12,003	16.47
3	수산물	8,735	21.31
4	화공제품	12,450	7.06
5	기계설비	21,960	50.47
6	방직원료 및 원단	10,784	16.65
7	음향설비	5,076	18.8
8	전자부품	9,287	69.9
9	식량	4,454	43.17
10	광제품(기름포함 안함.)	3,161	159.29
11	종이 및 종이제품	2,028	6.27
12	칼라 텔레비	154	130.53
13	나무제품	533	0.24
14	계측기	1,616	8.98
15	스테인리스강 식기	557	11.36

(5) 단둥-신의주 간의 변경무역이 여전히 존재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의 기복이 아주 크다. 가장 낮은 해(2000년)에는 6.6%이었고 가장 높은 해(1998년)에는 62.5%에 달했다. 2003년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50% 선에서 맴돌았다. 2004년에는 57%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수입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의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대중국 의존은 대북경협에서 단둥(丹東)통상구의 가치와 영향력을 높여주고 있는 동시에 중국기업의 위험부담도 가중해졌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밀수활동도 더욱 퍼지게 되었다.

나. 단둥(丹東)통상구 교역방식의 다양화

통상적으로 보면 변경무역에는 변경호시(互市)무역, 변경소액(少額)무역과 관광쇼핑무역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이외에 단둥(丹東)시에는 수상교역선(水上交易船)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교역방식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1) 수상교역 방식이 증가

랴오닝(遼寧)성과 북한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북·중 변경무역은 최근 2년간 연평균 교역물량이 300만 톤이 되는데 여기에서 수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170만 톤이 된다. 화물품목은 북한에서 수산물, 폐철, 철, 금, 은 등 금속광물과 석탄 수출이 위주이다.

중국의 수출품목은 식량, 식품, 일용품과 5금가전(五金家電)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⁷ 1980년대 말부터 랴오닝(遼寧)성과 북한 사이에 수상변경무역은 현지 경제건설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둥(丹東)시는 1996년에 『단둥(丹東)시 변경소액무역 수상운송 관리잠정방법』을 발표함으로써 변경무역의 수로운송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로부터 15년의 발전을 거쳐 2010년 말 수로운송선박이 168척으로 증가하였으며 변경무역에 이용되는 부두가 6곳이 된다. 북·중 수로운송은 고정항로, 고정선박, 짧은 거리(4~40해리), 짧은 시간(반시간~5시간), 작은 적재량(10~100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경제가 점차 개방됨에 따라 북·중 변경무역량, 특히 수로통상구 수출입교역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2006년 이래 교역물량이 해마다 300~400톤에 달했고 교역화물은 주요하게 북한 신의주에서 단둥 통상구로 수출되는 공업원료와 연료 등 대량화물들이다. 압록강대교가 차량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화물열차도 신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비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 철도 운송 방식은 이미 현재의 운송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에는 대량의 화물이 적체되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랴오닝(遼寧)성 교통관리부서와 북한의 지방정부는 압록강의 랑터우(浪頭)항과 신의주항 사이의 수로운송선을 개통하였으며 향후 북·중 수로운송 변경무역이 북한의 여러 항구에게까지 확대되도

¹⁷ 5금: 전통적으로 금, 은, 동(銅), 철(鐵), 석(錫)을 가리킨다. 지금은 모든 금속을 가리키는 데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나 철강제품을 뜻한다. 조기에 5금자재로 제품을 제작하였기에 '5금'이란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5금 업종으로는 기계5금, 건축5금, 장식5금, 일용5금 등이 있다. 중국에서 5금가전제품이란 일용 가전제품을 뜻한다.

록 추진하고 있다.

(2) 국경주민(邊民)들의 소액무역이 대규모

해마다 음력설(中國 春節)이 임박하면 북·중 접경지역에서 출입국 통행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평상시 매일 20~30명에서, 이 때는 매일 400명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 북·중 변경무역이 춘절 정점을 이루게 된다. 춘절기간 중국에서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변경무역회사들은 서둘러 북한으로부터 해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위해 춘절을 앞두고 사증신청이 넘쳐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해마다 북한주민이 중국을 방문하는 인원은 4만~5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단둥(丹東)시를 경유하는 북한주민이 해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금액이 무려 6,0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변방 주민의 보따리무역은 “끊임없고”, “극한을 초월하는 물량”이라고 단둥(丹東)시 세관인원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물량은 중국의 공식적인 수출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물량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3) 변경지역의 ‘밀수무역’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고 중국은 식량풍작을 거두어 양국 접경지역에서 식량밀수가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상황은 합법적인 교역이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다. 단둥(丹東)과 투먼(圖門) 등 지역에서 북한으로 식량을 밀수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이다.

특히 국제식량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08년부터 중국정부는 국

내 식량안전을 위해 식량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에 공식적으로 수출되는 식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밀수로 북한에 들어가는 양이 공식적으로 반출되는 양을 훨씬 초월하게 되었다.

다. 상품교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

(1) 원유 등 중국의 주요 대북한 수출품의 가격 상승

단둥(丹東)세관의 소식에 의하면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둥(丹東)통상구에서 수출하는 원유가격도 상승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원유수출관세도 연속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중국의 대북한 식량 수출량의 급락

단둥(丹東)시에서 수출하는 식량은 주로 완두(豌豆), 옥수수, 입쌀, 밀가루, 옥수수전분, 종자콩과 콩이다. 교역방식은 변경소액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가에서 밀, 벼, 쌀, 옥수수, 콩 등 식량에 대한 세금환불을 취소하였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잠정수출관세를 징수하였다. 위의 두 가지 정책을 실행한 후 단둥(丹東)통상구의 대북 식량수출은 뚜렷이 감소되었다. 밀가루 수출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쌀, 옥수수의 수출도 2008년 4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단둥(丹東)통상구에서 화학비료의 대북한 수출이 감소

중국정부는 2008년 4월 20부터 단둥(丹東)통상구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화학비료 등 관련물품에 대해 특별수출관세를 추가징수하면서 당월 대북 화학비료수출이 1만 톤으로 줄었다.

라. 접경관광 협력이 부상하고 접경관광 쇼핑무역이 활성화

접경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국경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의 이동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또 북·중 접경관광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접경관광은 이미 북·중 접경지역 경제발전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하였고 단둥(丹東)통상구는 북·중 접경관광을 위한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북·중 접경관광프로젝트는 이미 접경협력의 상징성 있는 브랜드로 부상하였고 관광과 쇼핑을 결합한 관광쇼핑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1) 접경관광사업의 빠른 성장

랴오닝(遼寧)성의 대북접경관광은 198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관광업은 이미 변경경제발전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고, 2010년 현재 북한관광에 참여한 중국인수가 누계 44.3만 명이며 이로 인한 직접수입은 6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3〉 단둥(丹東)시 북한관광 실태

연도	인원수	수입(만 위안)	교통수단	관광기간	여행사수	관광코스
1988	2,512	18.8	버스	1일	1개	신의주
1989	1,360	10.2	버스	1일	1개	신의주
1990	6,300	504	버스	3일	1개	묘향산
1991	7,700	616	버스	3일	1개	묘향산
1992	17,774	2,132.9	버스	3일	2개	평양, 개성, 묘향산
1993	13,138	2,364.8	버스, 기차	4~8일	2개	평양, 개성, 묘향산
1994	6,613	1,352.7	버스, 기차	4~8일	1개	
1995	15,000	3,000	버스, 기차	4~8일	3개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1996	18,248	3,049.6	버스, 기차, 배	3~8일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1997	45,265	4,200.3	버스, 기차, 배	1~8일	4개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1998	5,065	1,033	기차	1~8일	4개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1999	32,000	4,500	기차	3~6일	2개	신의주,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2000	47,704	7,327	버스, 기차	3~6일	2개	
2001	19,237	808	버스	1일	1개	신의주
2002	73,000	10,500	버스, 기차	1~6일	5개	신의주,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2003	12,736	893	기차, 보행	1, 3일	1개	신의주, 묘향산
2004	16,429	903.6	버스	1일	1개	신의주
2005	17,976	1,900.6		1, 4일	6개	신의주, 평양, 개성(여권소지)
2006	6,925	1,523.5	버스, 기차	4, 5일	6개	평양, 개성(여권소지)
2007	15,028	3,306.2	버스, 기차	4, 5일	6개	평양, 개성(여권소지)
2008	14,272	3,139.8		1, 4일	6개	평양, 개성(여권소지)
2009	25,000	2,400		1, 4일	6개	평양, 개성(여권소지)
2010	23,718	4,516	버스, 기차	1, 4일	6개	평양, 개성(여권소지)
합계	443,000	60,000				

단둥(丹東)시 접경관광의 발전과정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작단계는 1988년부터 2001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최초에는 1일 관광으로 진행되었고, 관광코스는 ‘단둥(丹東)-신의주’였으며 관광에 참여 할 수 있는 중국인은 랴오닝(遼寧)성 지역으로 국한되었으며, 매년 5,000명을 초과할 수 없었다. 또한 통행증명은 「변경통행증」을 사용하였다. 그 후 북·중 양국의 노력으로 북한 관광기간이 3~4일로 늘었고 관광코스도 평양, 판문점, 묘향산으로 확대되었으며, 관광인원수도 매년 5,000명을 돌파하였고 관광객에 대한 출신지역 제한도 해제되었다.

두 번째는 발전단계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이 시기 북한 관광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연간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을 때에는 8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단둥(丹東)시는 변경관광관리관공실(邊境旅遊管理辦公室)을 설립하였고 관광코스도 날로 풍부해 졌다. 이에 따라 관광시장 개발도 큰 진전을 이루었고 관광시장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아리랑축제를 하면서 대규모 중국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세 번째는 정체단계로 2005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이다. 중공 중앙관공청(中共中央辦公廳)과 국무원관공청에서 공안부 등 13개 부서에 「도박금지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면서 타지역(異地)에서 북한관광실무를 다루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를 계기로 접경관광시장을 정돈하고 관리를 강화하면서 북한관광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회복단계로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다. 국가와 성(省) 관련부서의 검사를 마친 후 우선 타지역에서 1일 관광실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 북한관광객이 2만 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벌써 1일관광, 3일관광, 4일관광이 개통되었다. 이와 동시에 상륙관광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단둥(丹東)시는 압록강관광 벨트를 건설하고 북한관광 집결지로 부상할 것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단둥(丹東)시에는 북한관광실무를 다루는 여행사가 5개 있다.

(2) 접경관광의 발전추세

접경관광의 발전추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관광은 날로 확장되면서 단둥(丹東)시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점차 중국 내 관광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을 보이며, 특히 황금평과 위화도, 양도(兩島)가 개발되면 더욱 많은 중국인이 북한관광에 나서게 될 것이다. 향후 5년간 북한관광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광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연간 성장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관광상품이 풍부해지면서 흡인력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관광시장이 더욱 많은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둥(丹東)시만 해도 이미 여러 기업들이 북한과의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륙관광, 반날관광, 2일관광, 휴가관광 및 관광접대시설건설 등 북한관광자원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관광접대 및 서비스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북한의 관광상품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전환하고 있다. 향후에는 휴가관광이 점차 일반관광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관광은 중국인들의 출국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접경관광은 단둥(丹東)시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상품이 풍부해지고 관광시장이 확대되며 서비스가 제고됨에 따라 단둥(丹東)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집결지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 등 접경무역이 활성화 되고 각종 서비스업이 확산되는 등 접경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북한관광프로젝트가 양국정부로부터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북·중관계가 날로 친밀해지고 양국 경제협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북한관광이 양국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 것이다.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관광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결해야 하는 문제

첫째, 출국수속절차의 과정이 길다. 현재 1일관광을 위한 절차를 밟는데 4일이 걸리고 평양을 경유하는 4일관광은 출발 3일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북한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단둥(丹東)에서 3일간 체류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부 관광객은 도중에 북한관광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출국수속 절차가 복잡하다. 관광객들은 북한관광을 위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여행사의 확인, 공안당국의 확인, 북한관광부서의 확인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어느 한 개 관문만 넘기지 못하더라도 관광객은 북한관광을 거절당하게 된다. 가령 여행사의 신분확인 통과되더라도 출국 전에 공안당국에 가서 면접을 보고 자료와 신분을 재확인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크다.

4. 중국 위안화의 대북한 국경 유동액 규모

북·중 접경지역에서 위안화가 거래되고 있는 것은 접경무역이 활성화되고 양국민민들의 상호방문이 빈번해졌으며 관광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위안화는 북한에서 당국과 민간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액수의 위안화가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

가. 위안화의 대북 초국경 유동의 기본상황

(1) 초국경 유동의 종류

첫째, 양국 변민들이 호시무역이나 변경소액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한다.

둘째, 관광이나 친척방문 때 휴대한 위안화가 북한에서 소비된다.

셋째, 북한의 국내은행이 단동시의 상업은행에 위안화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위안화를 저금한다.

넷째, 도박, 마약매매, 돈세탁, 밀수 등 비합법적인 거래에 위안화가 사용된다.

(2) 초국경 유동되는 위안화의 규모와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

초국경 유동되는 위안화의 규모와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현재 북·중 간 공식적인 은행거래통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위안화가 현찰을 휴대하는 방식으로 유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일인당 휴대한 위안화 금액을 추계해

낸 바탕위에서 단둥(丹東) 변방에서 전년 출입국 인원수를 파악하여 랴오닝(遼寧)성의 한해 초국경 유동량과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을 추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8년 단둥(丹東)시에서 위안화의 대북 초국경 유동액을 추계해 보면 유출액이 21.2억 위안이고 유입액이 19억 위안이었다. 즉 당해년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은 2.2억으로 전년대비 3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위안화의 대북 초국경 유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1) 초국경 유동되는 위안화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

최근 위안화가 평가절상됨에 따라 북한의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도 보편적으로 위안화의 보유를 선호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위안화의 유통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가 북한으로 유입하는 규모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초국경 유동되는 위안화는 주로 교역활동에 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무(商務) 출국인원들이 휴대한 위안화 금액이 총 유출액의 87.2%를 차지하고, 상무입국인원들이 휴대한 위안화는 총 유입액의 8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경 무역과 관광업의 발전은 위안화의 초국경 유동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위안화는 접경무역과 관광소비에서 공용화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물건과 사람의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의 거래 수단으로써 기능이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즉 교역결제 수단으로써 위안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3) 위안화 유동의 주요방식은 북한을 왕래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중국과 북한 간에는 공식적인 은행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 인원들은 상무활동이든 관광이나 친척방문이든 모두 소요되는 자금을 현찰로 휴대하여 가야만 한다. 때문에 위안화를 현금으로 몸에 휴대하는 것이 초국경 유동의 주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중 접경 무역과 관광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날로 늘어난 물자와 사람들의 이동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위안화의 유동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이 보유하는 위안화를 집중 유입할 수 있는 공식통로 마련

2008년 5월 20일, 북·중 양국은 북한광선은행이 중국건설은행 단둥(丹東)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위안화 현찰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하여 예금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광선은행이 계좌의 잔여액 범위에서 여러 가지 실무를 볼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비록 규모가 작지만 북한에서 유통 및 보관하고 있는 위안화를 집중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다. 극복해야 하는 과제

첫째, 북·중교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출세금 환불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가 빠르게 회수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수출이 제한을 받고 있다.

둘째, 위안화가 규칙을 어기면서 유동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셋째, 위안화가 국경을 통해서 대량 유출·유입됨에 따라서 중국의 국제수지 추계에서 통계오차가 확대되었다. 접경무역과 출국관광소비는 대부분 위안화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수지 통계신고

시스템에서 빠지게 됨으로 통계오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5. ‘일교양도(一橋兩島)’ 개발은 단둥(丹東)의 초국경 경제협력 촉진 전망

가. ‘일교양도(신압록강대교, 황금평, 위화도)’ 개발 실태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 양국은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할 것을 협의하였고, 2010년의 마지막 날에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양국의 고층인사들이 참석하였으나 양국 모두 조용히 다루었고 많은 세부내용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양국 교역량의 70%가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011년 6월 상순, 북·중 양국은 압록강에 있는 황금평과 위화도를 협작 개발하는데 합의하였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 천더밍(陳德銘) 중국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노동당행정부장은 라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에서 북·중 나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 개발 협력연합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공동주최하였다.¹⁸ 이 회의에서 양 측은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상호공영”의 개발협력원칙을 확인하였다. 현재 ‘兩島(황금평과 위화도)’의 개발원칙은 “공동개발, 공동관리”이다. 향후 양국은 어떻게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

¹⁸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양국의 경험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중 양국은 북한 경내에 있는 나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를 협력개발하는데 합의를 하였으며, 협력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추진기구로 ‘북·중 두개 경제구협력개발연합지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천더밍 중국상무부장과 장성택 부장이 연합지도위원회의 중국 측 위원장과 북한 측 위원장을 맡았다.

하고 효과와 이익을 창출하며 양자가 상호이익을 얻을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나. ‘일교양도(一橋兩島)’ 개발은 단둥(丹東)지역의 대북한 영향력을 증대

‘일교양도’의 개발과 건설은 단둥(丹東), 랴오닝(遼寧), 동북동부 지역의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랴오닝(遼寧)연해경제벨트 건설에도 아주 유리하다. 랴오닝(遼寧)연해경제벨트의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인 단둥(丹東)은 압록강과 북한의 서북면을 겨냥하고 있다. 비록 아직 두만강지역만큼 국제화가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구조건이 좋고 한국,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크다.

‘일교양도’ 개발을 계기로 다롄(大連), 단둥(丹東), 통화(通化), 무단장(牧丹江) 등 13개 도시가 『동북동부경제벨트 압록강경제협력 실행구축규획』을 기획하고 있다. 이 규획은 동북동부지역의 변두리(沿邊) 및 연해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대외개방하는 새로운 구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교양도’ 개발은 단둥(丹東)의 향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단둥(丹東)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시켰다. 압록강과 랴오닝(遼寧)연해경제벨트 및 두만강과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이 두 지역의 위치는 아주 특수하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 모두 이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이 만약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나라들은 이 지역에 투자하고 공동개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국가들은 북

한이 더욱 개방적이고 주변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을 개발하는 의의는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동북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동북아통로를 개통함으로써 중국동북, 라오닝(遼寧), 지린(吉林), 단둥(丹東) 및 심양의 대북투자 새로운 루트를 구성하게 되었다. 관계자의 전망에 의하면, 신압록강대교 건설 후 관광객 1일 통행량이 2,000명이고 화물차 1일 통행량은 2,500대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통행능력이 5만 명과 2만 대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중국상품의 북한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지만 북한과의 교역은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생각, 자본과 새로운 협력프로젝트는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넷째, 북한과의 관광과 외화거래가 활성화되고, 인원 왕래와 정보 교류가 진일보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 진출은 선양(瀋陽)-단둥(丹東)고속도로와 미래의 선양(瀋陽)-단둥(丹東)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라오닝(遼寧) 중남부경제구와 라오닝(遼寧) 연해경제벨트의 발전과 대외교류를 이끌게 될 것이다.

여섯째, 북·중 경제벨트가 조만간 형성될 것이다. 이 경제벨트는 장기적으로 압록강에서 시작하여 선양(瀋陽)을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통할 것이며 중국경제의 대동맥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다. ‘일교양도’ 개발은 라오닝(遼寧)연해경제벨트 발전에 기여

첫째, ‘일교양도’를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에 더욱 많은 역외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대량 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술, 인재, 정보 등 요소들도 함께 유입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단둥(丹東)의 경제발전속도와 현대화된 도시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단둥(丹東)이 대외개방의 최전방으로 될 것이다. 단둥(丹東)은 접경지역의 광산품개발, 수산물가공, 복장가공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하청협력, 중약재산업 등과 역동적인 보완성을 이루어 전방위적이고 넓은 영역과 다차원의 협력공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일교양도’의 개발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동시에 동북 동부철도 등 중대한 인프라시설 건설과 함께 단둥(丹東)의 지리적 이점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단둥(丹東)은 동북 동부 지역 대외개방의 문호와 통로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화물을 단둥(丹東)항구로 끌어들이는 항구와 배후지역이 결합된 새로운 대통로가 형성 될 것이다.

셋째, 중국지역의 경제분포에 따르면 향후 내이멍구(內蒙古) 동부 5개 맹(盟)과 시(市)가 포함된 동북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동북경제권이 앞으로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및 환발해경제권에 이어 중국의 제4경제성장권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둥(丹東)은 동북경제권의 대외개방 문호와 통로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 ‘공동개발, 공동관리’ 경제개발협력방식이 주목

2011년 6월 8일, 황금평·위화도경제구 개발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이번 협력에서는 ‘공동개발, 공동관리’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서 중국은 북한당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경제의 ‘조혈(造血)’ 능력을 키우려는 발전목표를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북·중 협력모델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는 중국의 ‘완충지대’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북한이 향후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원과 ‘수혈식’ 원조를 초월하여 새로운 협력방식으로 자신의 경제적 ‘조혈’ 능력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중국변두리(沿邊)지역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면, 헤이룽장(黑龍江)성이나 신장(新疆), 특히 메콩강지역은 모두 지역역량으로 부상하였지만, 북·중 접경지역은 아직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협력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면서 경제관리, 무역촉진, 투자유치 및 금융산업 등 다방면에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들이 진정으로 협조하여 국내에서 윈-윈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당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외개방과 개혁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북·중이 효력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북·중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법규를 기업의 참여에 유리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요약한다면 교통연계가 기반이고 투자환경이 전제이며, 무역개방과 경제교류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6.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시사점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 이것은 한국 민간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때에 한국기업이 북·중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러한 경색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한국기업이 북·중경협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만약 한국기업이 참여한다면 대북경협에서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본, 한국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원자재’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3국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공동투자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경제발전 상황에 비추어, 북·중 양국은 아래의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한·중의 협력기회를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가. 물류부문의 협력

물류영역이 북·중 양국의 경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중 간에 이미 설치된 철도, 도로, 항구 등 인프라시설은 양국의 물류협력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물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접경지역의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 견지에서 접경지역 물류시설 개발은 중국과 한반도 간에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일본, 러시아, 유럽과 물류네트워크를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

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에 유익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물류영역의 협력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중 항구협력이 큰 진전을 보이면서 중국과 몽골을 연결시키고 동북경제지구를 남북으로 관통시키며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한국과 일본에 닿는 새로운 동북아 물류통로가 개통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는 동변도(東邊道)를 대표로하는 지역물류 통로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 자원부문의 협력

북한은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탄, 철, 흑연, 금, 은, 연 등 광산매장량이 많다. 주목할 것은 북한정부는 이미 외국 자본이 자원개발에 진출하도록 허가하였으며 합자방식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협력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의 가공수준을 높이는 방식 등을 통해서 자원부문에서의 협력수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에너지부문의 협력

현재까지 북·중 에너지부문의 협력은 전력과 석유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세계 에너지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 북·중 양국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압록강유역의 수력발전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부문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태양력, 풍력 개발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의 핵심도 새로운 에너지개발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하는 것은 한·중이 북한의 새로운 에너지개발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라. 제조업부문의 협력

북·중은 민생과 밀접한 경공업분야, 특히 노동집약형 제조업부문에서의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경공업제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자질 높고 인건비가 싼 노동력이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가공제조업 등 노동집약형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중 양국은 이 부문의 협력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중국기업이 북한에 가공제조업 등 노동집약형산업에 투자한다. 북한의 전력사정을 고려할 때 투자기업을 양국접경지역의 북한 측에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인접한 중국 경내(개발구)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융통성 있는 운영방식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근제도, 기숙사 건설 등의 방식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기업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 부문의 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과학기술부문의 협력

북한당국은 경제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첨단기술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 점은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첨단기술부문의 현장 방문을 선호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화, 인터넷, 통신 등 정보산업은 아주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통신산업은 이미 이집트와 협력 중에 있으며, 북·중 IT부문의 협력도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바. 농업과 어업부문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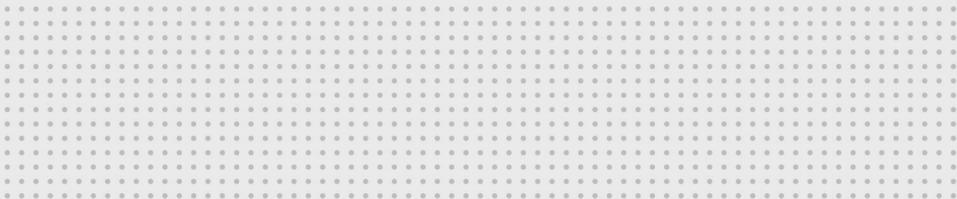
북한의 농업기술은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농업의 기술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료나 농자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과 기타 농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농자재와 비료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북·중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통수출농산물인 송이버섯과 고려인삼 등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북·중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북·중 양국은 생태농업, 농산품생산과 가공 등 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중국의 북·중 국경지역
경제협력 체계 및 투자 실태



1. 중국의 변경지역과의 경제협력 추진 및 관리체계

가. 중국의 변경무역

국제적으로 변경무역은 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에 관한 예외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WTO의 규정에 따르면 변경무역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양국 변경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이 접경선에서 각기 15km 이내의 지역에서 접경지역 양측 주민들의 생활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무역활동”을 뜻한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의 변경무역은 사실상 15km 이내라는 제한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변경무역은 이보다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크게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과 변경소액무역(邊境少額貿易)으로 나뉜다.

변민호시무역은 “접경지역의 주민(邊民)들이 접경선에서 20km 이내에서 정부가 지정한 개방된 지역이나 시장에서 규정된 금액이나 수량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상품교환 활동”을 뜻한다. 변민호시무역은 대외경제무역부와 세관총서(海關總署)에서 관리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성 및 자치구 인민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한다.

변경소액무역은 “육지 접경선을 따라 국가로부터 대외개방 허락을 받은 변경현(邊境縣)이나 변경도시(邊境都市) 관할지구 내에서 변경소액무역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이 국가에서 지정한 육지 변경통관소(口岸)를 통하여 인접나라 접경지역의 기업이나 기타 무역기구와 진행되는 무역활동”을 뜻한다. 접경지역에서 이미 진행된 변민호시무역 이외의 여러 가지 방식의 변경무역은 모두 변경소액무역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변경소액무역정책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변경

소액무역의 관리방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처럼 변경소액무역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변경소액무역정책의 대상은 변경소액무역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비록 접경지역에 있으나 그 범위는 WTO에서 규정한 15km 이내의 지역을 훨씬 넘어나 변경무역에 접경이 없는(邊貿無邊)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현재 변경무역을 거쳐 수입되는 상품은 그 대다수가 변경소액무역의 방식으로 완성되어 비록 소액으로 불리지만, 실제 거래액은 결코 작지가 않는 상황이다.

나. 북·중 변경무역의 주요 특징

새로운 중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북·중경제관계는 변경무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8년에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에서 구성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소비협동조합 중앙연맹과 『중·조 양국 변경지역 현물교역 의정서』를 체결한 후 1961년부터 정식으로 북한과의 변경무역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의 대북무역은 거의 반세기동안 부침을 겪으면서 발전을 해왔으며, 오늘날 현찰교역, 현물교역, 가공무역, 바터무역, 보따리무역, 해상호시무역(海上互市貿易) 등 여러 가지 교역방식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1) 북·중교역의 결제통로 개통

2008년 2월 21일부터 단둥(丹東)의 대북교역은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둥(丹東)의 대북교역에서 결제통로가 개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둥(丹東)의 대북교역은 중국의 대북교역에

서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에는 외화나 위안화 현찰로 결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신용거래와 교역에서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중교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북한 경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은행 단둥(丹東)지점에서는 상급의 허가를 거쳐 단둥(丹東)에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북교역기구나 개인은 대북교역 위안화결제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 내 자금은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안화가 대북교역의 결제화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이다.

지린(吉林)성 대북교역 사업회의가 2008년 2월 20일 연길에서 개최되어 「지린성 대북변경 무역결산관리 잠정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연변지역 대북교역의 결제통로가 모두 개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북·중무역에 은행결제가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규정’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위안화를 대북교역 결제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북교역기업이 외화나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의 무역기구나 개인이 중국 내 은행에서 개설한 외환계좌의 거래범위를 적절히 확대한다. 셋째, 북한의 무역기구나 개인이 중국내 은행에서 대북교역전문용 위안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무역기구나 개인이 대중국 수출교역에서 획득한 합법적인 위안화 수입으로 외환을 구매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북교역기업은 대북수출에서 받은 외환 현금을 경상항목 외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2) 대북교역의 물류시스템 개선

대북교역 통관소(口岸)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1,334km

에 걸친 접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접경선에 대북 통관소를 12곳 설치하였다. 지린(吉林)성의 투먼(圖門), 취안허(圈河), 구청리(古城里), 싸튀즈(沙坨子), 난핑(南坪), 산허(三河), 카이산툰(開山屯), 지안(集安)과 랴오닝(遼寧)성의 단둥타이핑완(丹東太平灣), 단둥도로(丹東公路), 단둥철로(丹東鐵路), 단둥항(丹東港) 등이 그것이다. 이상 대북교역 통관소는 모두 각자의 특색을 발휘하여 대북교역의 교두보로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사례로 지린(吉林)성의 지안통관소(集安口岸)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북 호시무역구(互市貿易區), 가공무역구, 물류창고구(倉儲區), 종합무역구와 신압록강대교 즉 ‘4구1교(四區一橋)’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대외무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지린(吉林)성 대북호시무역 건설기획에 들었으며 북한의 만포시와도 초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3) 극복해야 하는 문제

첫째, 교역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주로 대북교역에서 중국의 흑자가 너무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주요한 원인은 중국이 북한이 물자를 구입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중교역은 ‘교역’이라기보다는 ‘대북물자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경제거래에서 시장논리를 적용하고 있기에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는 북한의 물자수요는 오로지 교역의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의 교역흑자가 큰 것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북·중 변경무역의 리스크부담이 여전히 크다. 북·중 변경무

역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금회수의 어려움이다. 기존에는 북한이 선불금을 지불하고 중국 측이 교역물품을 발송하면 남은 물건값을 연기하거나 지불하지 않고 정부의 명의로 담보를 하거나 소규모의 교역에서는 신용을 지키고 큰 교역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북한이 대외무역정책을 빈번히 바꾼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기업들이 많은 물건을 보내도록 하고 중국기업들이 물건을 보낸 후에는 중국이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통제정책을 내온다. 결국 중국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두 번째 형태는, 북한은 하나의 기업이 한 물품을 가지고 여러 개의 중국기업과 거래하면서 중국기업들이 앞 다투어 북한에 물건을 보내게 한다. 중국기업이 물건을 보낸 후에는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형태는 부당한 방법으로 화물을 주지 않는다. 예로, 북한은 전화로 중국기업에게 화물이 통관소에 도착하였으니 속히 차량을 보내어 실어갈 것을 통보한다. 중국기업의 차량이 화물을 실으러 가면 북한회사는 휘발유, 식량 등 물건을 강요한다. 중국기업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화물을 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중국 측의 차량들이 빈차로 돌아 올 때도 있다. 네 번째 형태는, 북한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휴대물품과 수량을 마음대로 규정한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중국인들이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대량 휴대하도록 장려하고 사정이 풀리면 기존의 물품은 통제하고 새롭게 필요한 물품으로 바꾼다.

2.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제도 및 주요 기구(기업)

가.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제도 변화과정

북·중 양국은 1950년에 『교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4단계에 걸쳐 변화하였다.

제1단계(1950~1992): 정부 간 기장현물교역(記帳易貨貿易)단계. 이 시기의 북·중교역은 주로 양국정부 간에 이루어졌고 거래방식은 양국정부 간에 기장현물교역 방식이었다.

제2단계(1992~2006): 자유발전단계. 1992년 북·중 양국은 기장현물교역 방식을 없애고 현찰결제방식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점차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북·중 간의 경제관계도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관계에서 점차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관계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정시기의 마찰과 적응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의 본질은 새로운 경제협력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북·중경협은 시장경제논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제3단계(2006~2010): 정부유도단계. 2006년 1월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정부유도, 기업참여, 시장운영(政府引導, 企業參與, 市場運作)”이라는 북·중경협방침을 제기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동의를 얻었다.

제4단계(2010~현재): 2010년 8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상호이익을 공동이 도모하는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추진하는 것은 양국인민의 근본이익에 부

합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상호공영(政府主導, 企業爲主, 市場運作, 互利共贏)”의 북·중경협(北·中經協)의 새로운 방침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북·중경협 방침의 확립은 북·중경협이 기존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호혜호리(互惠互利), 공동발전, 상호공영(合作雙贏)의 새로운 협력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영역과 방법을 개척하고 양국 경협을 더욱 발전시키며 공동발전을 가져오고자 한 것이다.

나.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주요 기구(기업)

중국의 대북경협은 정부주도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북경협 관리기관도 기존과 달리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역할을 하게 되며 상호조율하게 된다.

(1) 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기구 개혁방안과 「기구설치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國務院關於機構設置的通知)」¹⁹에서는 ‘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였다. 그중 제5항에서 “중앙재정의 건설자금을 안배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중대한 건설항목, 중대한 외자항목, 해외자원개발류 중대한 투자항목과 거액외화투자항목을 심의하며 심사비준 한다. 민간의 투자방향을 유도하고 외자이용과 해외투자전략, 기획, 총량균형과 우질구도목표 및 정책을 연구하고 제기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대외경협을 담당하고 있

¹⁹ 國發(국발), 11호 (2008).

는 부서는 ‘외자이용과 해외투자사(外資利用和境外投資司)’이다. ‘외자이용과 해외투자사’에서 해외투자전략, 총량, 구조, 외화이용 계획과 정책을 규정하고 해외자원개발류 투자와 거액외화이용 투자항목을 조정하고 배분한다.

결론적으로 대북경협에 필요한 거시적 계획과 지도의견은 ‘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 국가 상무부

국가 상무부의 주요 직무는 국내무역과 국제경제협력의 발전전략 및 정책을 제정하고 국내무역, 외자투자, 대외원조, 해외투자과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 법규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국가발전과 기획위원회에서 거시적 계획을 제출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작성한다. 때문에 상무부는 대외경협의 담당부서이다.

상무부 내의 구체적 담당부서로는 ‘대외원조사(對外援助司)’와 ‘대외투자과 경제협력사(對外投資和經濟合作司)’ 및 ‘아시아사(亞洲司)’가 있다. ‘대외원조사’는 주로 대외원조정책과 방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외투자과 경제협력사’는 해외투자를 지도·관리하고 해외투자과 경제협력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며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아시아사’는 북한을 포함한 26개 아시아 국가들을 관리한다. 주요 직무는 담당한 나라별 경협발전전략과 발전기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나라별 경제관계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며 중국기업이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다.

(3) 외교부

외교부는 나라의 외교방침정책과 관련법률 및 법규를 관철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나라의 주권,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나라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사무를 보는 부서로써 외교의 총체적 구도에 따라 대외무역, 경제협력, 경제원조, 문화, 군사원조, 군사무역, 교육 등 면에서 관련부서와 조율하고 당 중앙과 국무원에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련 부서의 조율

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 국가 상무부, 외교부는 거시적, 정책적, 원칙적 면에서 대외 및 대북경제협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경험프로젝트가 추진될 때는 그 협력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부서들이 상호조율하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신(新)압록강대교 건설프로젝트는 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 상무부, 철도부, 교통부, 건설부,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의 정책조율이 필요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랴오닝(遼寧)성 및 단둥(丹東)시의 전력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무원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부서들이 조율하고 지방정부가 동원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 실적의 특징

(1) 중국의 대북한 투자 배경

첫째, 중국의 대북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가 신속히

발전함에 따라 ‘대외 진출’ 전략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이 대북투자의 기본담보가 되었다.

둘째,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국내시장이 날로 포화상태로 발전하게 되고 시장시스템이 날로 성숙해짐에 따라 중국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찾기에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아직 미개발상태인 북한은 자연히 중국기업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은 대북투자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셋째, 최근에 와서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끊임없이 탐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개혁을 위한 이론 수립과 실험적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였으며, 불합리한 경제제도에 대해 기초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중국기업이 대북투자를 추동하는 ‘촉매’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고립상태가 중국기업에 대북진출의 기회를 주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진출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은 이미 본격적인 확대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향후 기타 나라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에게 이러한 기회가 빨리 왔으며, 중국이 이 기회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기타 나라와 대조될 뿐이다.

(2)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특징

첫째, 과거 중국의 대북투자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이 많으나 행동이 적고, 상담이 많으나 결과가 적고, 소형이 많으나 대형이 적음’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북투자가 급격히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대북진출의 기본 조건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대규모 대외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과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고, 대외진출의 노하우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실한 북한의 인프라가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수송의 어려움과 도로상황의 열악함, 그리고 항만의 적재능력이 부실한 것 등도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여기에 북한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이라는 측면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은 투자의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원은 인적자원과 지하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투자도 자연히 지하자원 개발로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투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

-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진출 기업의 이익창출이 어렵다. 중국 기업은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북한진출의 최대의 목적이자 목표이다. 하지만 북한은 계획경제이고 국가의 배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생산물은 국가소유가 되고 생산제품을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²⁰ 실례: 2005년 중국의 한 기업이 1억 달러 규모의 대북광산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상당대표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 원인은 1억 달러에 상당한 생산규모에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전력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어서 운송문제, 도로문제, 항만의 적재능력문제 등이 걸려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상적인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인프라요소의 상호배합이 없이 단일한 투자로서는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느 한 기업의 노력으로 해낼 수 없다.

- 법규가 건전하지 못하다. 북한은 비록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대외 경제협력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였지만 사실상 이런 법규는 북한 측의 회사에는 별로 구속력이 없고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구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북한의 투자유치정책에 문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 오광(五礦)그룹의 북한 무산철광에 대한 투자는 이미 2005년에 북·중정부 간에 체결한 협력프로젝트임에도 실무 상담에 들어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그 원인은 북한이 무산철광 개발조건으로 김책제철소를 복건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대량의 건설자금이 필요한데²¹ 이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기업에게 광산개발권을 파는 조건으로 국내건설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중국기업은 북한에 진출하려면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광산개발에서 '합영' 방식을 제한하고 '합작' 방식만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산개발에서 '합영' 방식은 성공사례가 나와 있지 않다. '합작' 방식은 본질적으로 단기차관이나 다름없다.²²
- 북한이 제시하는 지하자원의 개발가치가 높지 않다. 북한이 내놓은 광산은 보통 광맥이 좋으면 광석의 함량이 보통 수준이고, 광석의 함량이 좋으면 광맥이 여의치 않아 대규모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개발가치는 여의치 않고 놓치기에는 아쉬운 것이다.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투자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 북한의 신용불량은 이미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나의 광산을 놓고 여러 개의 기업이나 정부부서가 동시에 외부와 상담에 나서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투자유치에만 관심을 돌리고 유치 후 관리에는 무관심이다. 대북 진출에서 피해를 본 중국기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기업은 부득불 북한의 권력자를 이용하거나 투기의 방식을 택하는 등 비정상적인 협력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

²¹ 북한의 10만 세대 가구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이 68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²² 북한은 '합작' 방식을 택한 후 투자자 측이 투자액을 상환한 후 투자자 측에게 광산제품 판매권과 2:8의 이윤분배를 보장해 준다. 그리고 투자액의 상환방식은: [광산제품의 국제 시장가격+판매권+이자보상율(가격혜택 혹은 이자보상)]×보상기한이다. 여기서 이자율은 3개월일 경우 7%이다. 이로 볼 때 '합작'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방식이 아닌 것이다.

둘째,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점차 성숙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업의 차원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망동(盲動)에서 이성(理性)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자영역이 과거 분산되어 있던 것에서 점차 중점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규모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정부는 대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정책에서 시작하여 2006년에는 ‘정부유도’로, 2010년에는 ‘정부주도’라는 대북경협정책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차원에서는 북·중경협에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경제활동과 시장이 날로 규범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투자와 교역의 결합 형태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주로 보상무역의 방식을 취하였다. 즉 실물로 투자하고 교역의 방식으로 투자를 회수하였다. 중국기업은 북한에 생산시설 등 생산수단을 투자하고 생산물로 보상받았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은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가 아니고 특수한 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북한의 현재 실정에 적합하고 위험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동시에 대북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북투자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북한의 생산능력이 부실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교역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시사점

가. 북·중 간 상호 정치신뢰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은 예로부터 순치상의(脣齒相依)의 친선적인 이웃나라 이었다. 양국은 1949년 10월 6일에 국교를 정식 체결하였고 1950년대의 한반도전쟁에서 북·중 인민은 피로서 맺어진 친선을 결성하였으며, 1961년 7월 11일 양국은 『중조친선합작호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냉전종식 후 북·중관계의 발전은 굴곡적인 과정을 지나왔다. 냉전 후 북·중관계는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점차 국가이익 중심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한·중수교는 북·중정치 신뢰관계에 큰 상처를 입혔다. 또한 1992년 한·중수교와 더불어 북·중교역 방식을 기존의 가장 현물 교역방식에서 현찰지불방식으로 바꾸었다. 북한경제가 열악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북·중교역 방식을 바꾼 것은 북한으로 매우 아픈 경험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대북 군사원조정책도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는 정치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향후 북·중관계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정치적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중관계의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중관계는 여전히 동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양국은 『중조친선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²³ 물론 냉전이 종

23 이 '조약'에 의하면 쌍방은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하며 협정국 중 어느 일방이 다른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의 무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했을 때 협정국 중 다른 일방은 전력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식되고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흐름으로 된 현 시대에 극단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에서 아직 냉전 구도가 남아있고 북한의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안정은 결국 중국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의 안전우려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도 현실문제이다. 한반도에서 냉전구도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 '조약'은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북·중관계의 동맹의 속성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북·중관계의 이중성의 다른 모습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수십 년 간의 사회주의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었으며 대외정책에서도 전방위적인 개방을 이루어 왔다.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고 북한과의 교역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결국 북·중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중국의 대북한 쓸림정책의 변화와 함께 양국관계가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이루는 상호 조절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중 양국이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해야하는 이유는 양국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북·중 양국이 모두 서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동맹의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과 방식 및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에서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격차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실망을 불러오게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만정서는 양국관계 처리에서 갈등을 초래

하게 될 수밖에 없게 한다. 사실상 현재 북·중관계가 아주 잘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관리들은 중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불만은 바로 동맹관계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실례로 북한은 중국이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하는데 대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이 북·중경제협력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성이 북한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심화되지만 상대적으로 북한경제 상황이 호전될 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은 줄이고 그 대신 일본이나 유럽 등 발달한 나라로 경제협력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전술은 북·중경제 협력구조나 협력수준 등 많은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중국에 대한 감정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원인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은 결국 상호 정치신뢰구축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한·중 정치적 신뢰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북·중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는 한·중관계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때문에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지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한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목표의 차이성이라고 하겠다. 중국이 중요시 하는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이다. 하지만 한국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경험을 통한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속에 갈등과 대립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

이 항상 한국의 불만과 의심을 불러왔다. 비록 한·중수교를 계기로 근 20년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에 유리하고 북한에 불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도 찬성표를 던졌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한반도 정세의 악화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높였으며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국에 대한 한국의 유감은 더욱 커졌고 한·미동맹은 더욱 긴밀해졌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중국의 안보적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한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목표의 차이성은 양국의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정세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서 정치적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본질은 심각한 경제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포기과 개혁·개방을 강조해 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이 과연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하거나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원인은 북한 자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객관적 원인도 충분히 존재한다.²⁴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²⁴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아마도 심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포기를 주장하는 관점은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핵포기 후 대량의 경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설사 북한이 핵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시장경제를 지향한 경제개혁이 없이는 대량의 외자가 북한으로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개혁이 없는 핵포기는 역시 북한의 운명을 바꾸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이익의 재분배이고 기존권력의 재분할이며 기존질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과 정세안정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원하고 있으며 한·중 공동의 이익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덩소핑(鄧小平)이 지적했듯이 경제발전은 중국의 ‘최대의 정치’이며 중국국민의 ‘최대의 이익’을 대표한다. 중국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중국은 평화적 국제환경 구축을 대외관계에서 장기간 견지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주변관계를 잘 처리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가장 큰 기회가 주변에 있는 동시에, 가장 큰 도전도 주변에 있으며, 가장 큰 희망도 주변에 있고, 가장 문제가 나기 쉬운 곳도 주변에 있다.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인 선린친선정책의 기반 위에서 주변국들을 상대로 ‘이웃을 벗으로 삼고 이웃을 잘 대한다’는 ‘목린(睦隣), 부린(富隣), 안린(安隣)’정책을 취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대주변국 선린정책은 최근에 들어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자체의 발전과 이러한 발전이 주변국에 주는 영향을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하여 중국의 선린정책이 더욱 개방적이고 협력의 정신을 내포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공동안전과 공동발전의 이념을 안린, 부린이란 구체적인 방침으로 전환하여 이를 선린정책의 바탕으로 하였다. 한마디로 북한의 안정과 발전은 중국의 국가이익의 요구이기도 하다.

북한의 안정과 발전이 한국에는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

서의 재편성이다. 때문에 개혁은 불가피하게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개혁은 양호한 대외환경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대외환경은 아주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아직 휴전상태에 있고 한반도에 아직 냉전구도가 남아있으며 북·미 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북한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한다.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내란외환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가?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악화가 아마도 북한의 붕괴를 초래하면서 한국의 흡수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는 남북 간의 역량을 비대칭으로 몰아가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정세가 안정되면 한국의 흡수통일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이다. 만약 한국도 북한정세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중국과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며 사명이라고 인식한다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관계는 하나의 큰 장애물을 넘게 될 것이다.

다. 북한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중경제협과 남북경제협은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중경제협력이 남북경제협과 경쟁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자가 경쟁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상호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대외경제협을 독점할 수 없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대외경제협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게 될 뿐인 것이다. 오히려 북한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외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으로 인하

여 북·중경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한국보다 조금 먼저 대북경협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고립상태가 중국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북진출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과 ‘공동발전전략’을 취해야 한다.²⁵ 공동발전전략은 북한경제의 ‘조혈’기능을 키워줄 수 있어 북한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테면 공동발전전략을 통하여 북한과 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 관광, 과학기술, 농업, 노동 집약형 제조업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경협에 공동발전전략을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가 자연자원개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북한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발전목표를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워 민생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초에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도 제시하였다. 관건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발전노선을 선택하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에 대해 줄곧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왔었다. 하지만 2000년 5월, 북한 노동당총비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²⁶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언급에 변화가 나타났다.

²⁵ ‘공동발전전략’이란 이웃나라 간에 진행되는 경제협력의 일종으로, 주로 인프라건설, 자원 개발 및 산업의 분업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수행하는 방식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평가(2000~2011)

방문차수	방문기간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평가
제1차	2000.05.2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개혁·개방이 위대한 성적을 따냈고 종합국력이 강해졌고, 국제적 지위도 날로 높아짐. ○ 이 모든 것은 등소평(鄧小平)이 제기한 개혁·개방이 정확했음을 입증함. ○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지함.
제2차	2001.01.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가 개혁·개방 이래 천지개벽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남. ○ 이는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정책이 정확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함.
제3차	2004.04.1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음. ○ 양국은 농업, 도시건설 등 다방면에서 상호 학습하고 상호 참고해야 함.
제4차	2006.01.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 건설과 개혁·개방사업이 거대한 성적을 얻음. ○ 중국의 '놀라운 발전'은 중국공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이 중국의 국정에 부합됨을 증명함. ○ 중국의 참신한 면모와 넘치는 생기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정확성을 증명함.
제5차	2010.05.0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방중 때마다 중국이 취득한 새로운 성적을 느낌. ○ 중국의 발전성적은 조선인민에 대한 거대한 고무임.
제6차	2010.08.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개방 후 중국은 신속한 발전을 하였고 도처에서 생기가 넘치고 있음.
제7차	2011.05.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건설을 하고 있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음.

출처: 본 도표는 중국 신화사의 보도문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26 이는 17년 만의 중국방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북한 발전전략의 특징은 무엇일까? 북한의 국가전략은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한 도약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경제라는 것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이다. 대외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북한경제의 기본이 아니다.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도형의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 북한의 국방공업, 중공업은 국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체로 해나가고 경공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즉 북한은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외경제의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갖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에서 중심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전력공업과 금속공업 그리고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자립경제발전노선은 오늘날에 와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거의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자재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족한 외환자금과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는다면 중국의 발전경험이 유익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북경협에서 당연히 시장경제논리에 의

한 기업의 활동이 위주로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경제체제의 성격과 경제실태를 고려했을 때, 단순한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위주의 협력만을 통해서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이윤추구라는 기업 위주의 접근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북·중 간 경제협력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의 상이한 경제체제의 차이성을 극복하는데 필요하다. 북·중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국의 제도적 차이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없애려면 양국의 중앙정부가 나서서 평등하고 친선적인 협상과 대화메커니즘을 통하여 상호간의 갈등과 미찰을 해소하고 북한 진출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유익하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북한경제를 발전시키자면 비시장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생산요소의 유통을 조절함으로써 북한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정부의 조절기능을 활용해야지 기업이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중 양국의 균형적인 발전에 유익하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조직으로서 기업 경영활동의 동력은 이윤추구에 있으며 이윤은 기업의 최고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없이 기업을 위주로 하고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중국과 북한 간에 역량대비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북·중경협은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넷째, 중국의 지방과 기업의 적극성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 북·중

경협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자면 중앙정부의 조절 역할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대북경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북·중경제협력이 규범화, 정규화, 제도화를 실현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북·중경협 상황을 살펴보면 투기적이거나 북한의 권력층과의 연줄에 매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직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활용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해소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아주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경제의 성장과 북·중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V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3.26)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5.24)로 인해서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라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임가공 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주로 석탄과 가리비 등 일차산품을 들여오는 일반교역은 2010년 1억 1,766만 달러로 2009년의 2억 5,614만 달러보다 54.1% 감소하였으며, 원부자재를 보내 가공을 한 뒤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위탁가공도 2009년 4억 971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억 1,759만 달러로 22.5%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도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부분들에 대한 유예조치에 힘입은 것으로, 올해(2011년)에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조만간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의 대북지원은 301억 원으로 2009년의 775억 원에 비해 61.2% 급감하였다.

북한은 남북교역의 감소에 따른 외환 획득액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009년보다 30% 증가한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8월 말까지 북·중교역 규모는 약 3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한 것을 뿐만 아니라 벌써 지난해 교역 규모를 추월한 것이다. 반면에 남북교역은 같은 기간 동안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교역과 북·중교역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차원의 남북교역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으며, 한국기업들이 떠나간 공간을 중국업체들이 차지하여 중국기업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황금평과 나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북·중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제관계 사이에는 대립적·경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정세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한국자본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중의 3각 관계를 경쟁적 구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 공동의 목표 설정

북·중과 남북한의 경제관계를 협력적, 보완적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경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지역의 빈곤해소 및 경제적 발전이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삶이 개

선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국과 한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정치체제 및 군사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영역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초기에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목표는 무엇이 있을까? 경제분야에서의 변화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이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경제개혁’ 범위 및 속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의 목표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경제가 대외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3차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정상적인 대외경제관계 구축

첫째, 국가 기능의 차원에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은 ‘정상적인 대외경제관계를 수립’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와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불법적인 무역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계약을 중시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편화된 경제 질서를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북한이 대외경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맺는 법규와 제도의 국제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도록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책당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합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한경제의 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장화의 촉진

둘째, 경제운용체계의 차원에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시장은 자생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국의 견제와 통제로 인하여 시장활동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속성에 따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북한의 시장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선택권 확대

셋째, 주민들의 경제생활이라는 차원에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은

북한주민들이 경제생활에서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생존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식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점차 경제적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복합적인 접근 필요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서 대외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경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위의 세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협력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대북한 변화 유도 정책이 북한정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경제관료와 일반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은 ‘제도의 개방’ 보다는 이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북한관료 및 일반주민들의 ‘사고와 선택의 개방’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한 ‘맞춤형’ 경제지원과 협력 추진

지속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인도적

지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함께 생산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의 투자가 절실한 입장이다. 먼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경제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인도적 위기상황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지원 즉,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맞춤형’ 지원프로젝트 모색

역사적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지원 경험을 살펴보면, 대외원조는 제도개혁과 병행되어 추진될 때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생산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기획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도적 지원프로그램과 농촌의 식량증산을 위한 개발협력프로젝트가 제도 개혁과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장 촉진형 투자협력 추진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화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장화과정을 촉진하면서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경공업제품의 생산분야와 식료

품가공업 그리고 의류임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북한 내수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자본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성공사례 창출 지원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1970년대 초반 외채 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파동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로 무역적자 폭이 심화되자 지불능력에 문제가 발생, 외채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는 외채문제가 대두되어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이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상환부담도 없고 개방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도 없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이 합영·협력에 실패한 이유는 낮은 국제신용도,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및 패쇄적인 정치·사회 환경 등과 같은 열악한 투자환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제한된 지역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제도 및 인프라 미비로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보면, 북한당국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껴왔으며, 이에 따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심스럽게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북한이 황금평·신의주 및 나선지역에 대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대외개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당국이 대외경제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당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확산과 정부의 사회통제력 약화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대외경제 개방의 결과 부작용은 작고 성과는 크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방 초기단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공사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4대 경제특구 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3. 북한의 '4대 경제특구지역' 연계발전 방안 모색

큰 틀에서 북한의 4대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지역, 황금평과 신의주 지역, 나선지역, 금강산지역은 당분간 한국자본과 중국자본이 주로 투입되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경인접 지역에 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으로서는 개성공단지역과 금강산지역은 한국자본이 주도하도록 하고, 황금평·신의주지역과 나선지역은 중국자본이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며, 이들을 분리해서 운용함으로써 경제특구에 대한 통제와 관리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 성격이나 범주에

있어서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 및 거래방식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고려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역에 대한 투자를 남한자본이 주도하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협상 및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특구 관련 북한당국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특구지역을 다른 지역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특구 내에서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변화가 내륙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폐쇄적인 특구정책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개방정책은 또한 경제분야의 대외개방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요구되는 경제개혁 작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특구지역이 내륙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폐쇄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4대 경제특구'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방안은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계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투자자본의 연계

경제특구의 연계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제특구개발사업에 한국자본과 중국자본이 공동투자의 형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중국자본이 개성공단 추가 건설 및 금강산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자본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금평·신의주, 나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중국의 황금평·신의주, 나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의 형식으로 공동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당분간은 중국기업과 협력의 형태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도적 연계

남북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적으로 4대 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4대 경제특구 내에서 생산한 상품이 특구 입주기업 간에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4대 경제특구를 긴밀하게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중국, 북한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4대 경제특구의 총괄 운영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서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다. 물리적 연계

4대 경제특구를 연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연계를 물리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물리적 연계망 구축작업으로
는 교통망, 통신망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교통망을 구축하
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대 경제특구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기본적
으로 물류의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철도·도로 및 항만 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 작업을 한국과 중국이 공
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인적 연계

인적 연계는 각 특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특구 사이
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인력 활
용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는 특구 내 인력들의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구에 새롭게 진입하였거나 직종의 전환
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을 특구별로 특화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은 IT분야,
나선지역은 화학부문, 신의주지역은 섬유·의류부문 등으로 특화시키
자는 것이다.

4.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의 제고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에 대한 합
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런데 한·중 양국이 공동

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수단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상황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다를 경우 처방과 적절한 정책수단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평가는 국가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침체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회복국면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되는 북·중경제관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한·중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 서조차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를 위한 대화의 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양국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촉진을 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쪽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북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이 협력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적절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원배 외.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국토연구원, 2006.
- 신태용.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성별 11·5계획』. 서울: 산업연구원, 2006.
- 윤승현. 『두만강 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2009.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서울: 하나금융그룹, 2010.

2. 논문

- 권오국.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5호(평화문제연구소), 2011.
- 김범송.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5호(평화문제연구소), 2011.
- 김상훈.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북한경제리뷰』. 8월호(KDI), 2010.
- 배종렬.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 과제.” 『수은북한경제』. 통권 제14호(한국수출입은행), 2009.
- 원동욱. “북·중 간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교통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통권 제14호(한국수출입은행), 2007.
- 이종운.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9권 27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임강택. “동북아지역의 동태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남북한』. (인천발전연구원), 2005.
- 조명철. “북한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나선·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7권 42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조명철·이종운. “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9권 39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3. 기타자료

원동욱.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과 대북협력 확대의 현황과 과제: 초국경 연계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평화재단 제50차 전문가포럼. 2011.10.

윤승현. “최근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

최정근. “최근 북·중 경제협력 실태.” 평화재단 주최 비공개전문가포럼 발표자료. 2011.3.

한국정책금융공사.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북한정책포럼 제19차 세미나. 2011.10.

『길림신문』.

『연변일보』.

『人民日報(인민일보)』.

《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代表大會上的報告(장쩌민의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 상 보고)》.

國發(국발). 11호, 2008.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마-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찬,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2,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 (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 (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 (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오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上)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中)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下)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이상연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 - 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캐스린버티니, 린리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김석진, 김정수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남경민, 임을출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P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P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중의 3자 관계를 경쟁적 구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요청된다.